

**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…
사람 중심 해운대!**

김 백 철 의원



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
사람中心 해운대 !!!

사회 양극화 완화, 고용-복지-성장의 선순환

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
정규직 고용관행 민간 확산

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

기간제

⇒ 정규직 전환

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

전환방법, 전환방식, 채용방식·임금체계

파견·용역

⇒ 정규직 전환

노사 및 전문가 협의

무기계약직

처우개선

인사시스템 체계화

대상별 맞춤형·단계적 추진

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 견지

- 1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
- 2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
- 3 [단계적 추진] 고용안정 ⇒ 차별개선 ⇒ 일자리 질 개선
- 4 국민 부담은 최소화, 정규직과 연대 추진
- 5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

인간중심
경영혁신

인사관리
원칙의
재정립

기존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비교

구분		기 존	개 선 안
전 환 기 준	상시 지속 판단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중 <u>10~11개월</u> 이상 계속 ① 과거 2년 이상 지속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(①+②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중 <u>9개월</u> 이상 계속 ① <u>삭제</u> ② 향후 2년 이상 예상
	전 환 예 외 사 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<u>6개</u> 사유 업무/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휴직·파견 업무대체자 등 <u>11개</u> 사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0세 이상 고령자 등 <u>2개</u> 사유 업무/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<u>5개</u> 사유
전 환절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 판단에 따라 전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기간제) 전환심의위원회 (파견·용역) 노·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환 → 컨설팅팀 지원
무기계약직 처우개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상여금 80~1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기계약직 정원관리(조례·훈령·규정) 명절상여금, 복지포인트 지급 식비 차별 없이 지급 기간제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상시지속업무 신설, 결원 시 정규직 고용

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

(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·교육기관용)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적용범위)
- 제3조(용어의 정의)
- 제4조(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)
- 제5조(정원)

제2장 채 용

제1절 총 칙

- 제6조(공정채용)
- 제7조(결원시 채용)
- 제8조(능력중심 채용)

제2절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사전심사제

- 제9조(계획수립)
- 제10조(심사)
- 제11조(후속조치)
- 제12조(준용규정)

제3절 채용방식

- 제13조(채용절차)
- 제14조(채용서류)

제4절 채용결정 후 조치사항

- 제15조(근로계약)
- 제16조(신분증)
- 제17조(내·외부망)

제3장 복 무

- 제18조(복무의무)
- 제19조(출근, 결근)
- 제20조(지각·조퇴 및 외출)

제4장 인 사

제1절 인사위원회

- 제21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

- 제22조(인사위원회의 구성)
- 제23조(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)

제2절 근무성적평정

- 제24조(근무성적평정)

제3절 전보 등

- 제25조(전보)
- 제26조(승급)

제4절 휴직 및 복직

- 제27조(휴직)
- 제28조(육아휴직)
- 제29조(복직)

제5장 근로조건

제1절 근로시간

- 제30조(근로시간)
- 제31조(휴게)
- 제32조(연장·야간 및 휴일근로)

제2절 휴일·휴가

- 제33조(유급휴일)
- 제34조(연차유급휴가)
- 제35조(경조사 휴가)
- 제36조(생리휴가)
- 제37조(병가)

제3절 모성보호

- 제38조(임산부의 보호)
- 제39조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
- 제40조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
제6장 임 금

- 제41조(보수)
- 제42조(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)

- 제43조(성과상여금)

제7장 퇴직·해고 등

- 제44조(퇴직사유)
- 제45조(해고)
- 제46조(해고의 통지)
- 제47조(정년)

제8장 퇴직급여

- 제48조(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)
- 제49조(중간정산)

제9장 표창 및 징계

- 제50조(표창)
- 제51조(징계사유)
- 제52조(징계의 종류)
- 제53조(징계심의)
- 제54조(징계결과 통보)
- 제55조(재심청구)

제10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

- 제56조(교육 훈련)
- 제57조(성희롱의 예방)

제11장 안전보건

- 제58조(안전보건관리규정)
- 제60조(건강진단)
- 제61조(산업안전보건법 준거)

제12장 재해보상

- 제62조(재해보상)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
- 제2조(관련 법령의 준용)

【 표준인사관리규정 신설 내용 】

구 분	주요 내용
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상시·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▲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 인정
② 정규직 전환 이후 체계적 인사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심사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급할 수 있는 기회 마련 ▲ 직종별 동일가치노동·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 유도 ▲ 교육훈련 다양화, 교육훈련 동기부여 강화
③ 조직일체감 및 사기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기존 무기계약직 명칭을 공무원 등 적정 명칭으로 변경 ▲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의 신분증 발급 의무화 ▲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·외부망 접근권한 부여
④ 공정 채용 확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공정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원칙 확립 ▲ 직무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 유도

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

기본원칙

- ① 상시·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
 - 상시·지속적 업무임에도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분할하여 비정규직을 반복 채용하는 행위는 지양
- ②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·심사·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인력운영의 합리성 제고
- ③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 확보



한국의 공무원 수(105만명)는 OECD와 비교해 많은 편일까?

2017년 기준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문 종사자

OECD 평균

18 %

노르웨이, 스웨덴,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

30 %

한국

8 %

(2019.12.07 세계일보 OECD보고서 발췌)

부산시 공공부문 전환규모 결정표

(2018 전환완료)

구분	기관명	고용				총 비정규직	전환 완료	총비정규 대비 전환율
		기간제	단시간	파견	용역			
지방자치단체	부산광역시청	613	35	0	630	1,278	835	65.3%
	금정구청	242	19	0	22	283	28	9.9%
	기장군청	423	10	0	36	469	53	11.3%
	부산강서구청	433	8	0	60	501	28	5.6%
	부산남구청	184	15	0	24	223	28	12.6%
	부산동구청	166	10	0	17	193	21	10.9%
	동래구청	120	18	0	21	159	36	22.6%
	부산북구청	213	17	0	23	253	39	15.4%
	부산서구청	173	3	0	0	176	15	8.5%
	부산중구청	116	0	0	9	125	21	16.8%
	부산진구청	132	20	0	52	204	78	38.2%
	사상구청	191	43	0	15	249	28	11.2%
	사하구청	230	26	0	5	261	49	18.8%
	수영구청	192	20	0	7	219	20	9.1%
	연제구청	199	1	0	8	208	25	12.0%
	영도구청	119	8	0	29	156	26	16.7%
	해운대구청	454	22	0	23	499	42	8.4%
소계		4,200	275	-	981	5,456	1,372	17.3%

해운대구 기간제 공무원 전환 현황

(단위 : 명)

부서명	2018	2019	2020(예정)
재무과	3		
일자리경제과	1		
늘푸른과	1		
복지정책과	6		
생활보장과		2	
교통행장과	11		
가족복지과	2		
보건정책과	4		
건강증진과	7		
관광시설관리사업소	2		
인문학도서관	5		
계	42	2	

2019년 비정규직 사전심사 결과

853명

2020년 비정규직 사전심사 계획

880명



해운대구 정규직 비율

2020년

정규직

비정규직

1,034명

880명

54% (1: 0.8)

2020년 생활임금

서울시

10,523 원

부산시

10,186 원

해운대구

9,820 원